

法亂

강기갑 무죄 전교조 무죄 광우병 무죄 保-革 전면전 양상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 축발된 검찰의 불만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상황이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전날 전주지법이 전국교

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PD수첩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확신해 왔던 만큼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재의 갈등 상황을 폭발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검찰이 용산참사의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기피신청서를 내고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 구도를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나리를 뛰어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주요 사건에

이에 따라 PD수첩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벼랑끝 대치’ 상황으로 흐르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 대한 공방과 함께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를 초래한 이 향소심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기피신청서를 내고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온

법원이 용산참사의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기피신청서를 내고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 구도를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일련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양분되는 양상이다.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쪽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선 반면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마치 우리 사회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 100일간 지속됐던 촛불집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일련

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대해 무조건 사법부의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과연 언론의 비판보도가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이 애초부터 있었고 검찰과 법원의 법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갈등구도 속에서만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를 갈등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좀 더 근본적인 시각차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부내용과장 됐지만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 법원 무죄판결 근거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논리가 깔려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 본연의 기능인 정당한 비판을 한 만큼 검찰이 적용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민사소송이라면 사소한 오류라도 더 쉽게 정보도를 명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달리 취급해야 하고 이 때문에 앞서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등 나름의 근거를 갖춰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제작진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PD수첩 보도가 상당 부분 진실임을 증명하고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일부 지

엽적인 내용이 사실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맞는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보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했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다.

먼저, 법원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PD수첩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앞서 서울고법은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는 부분을 비롯해 PD수첩 방영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달리 정정보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일부 지

강기갑 무죄 판결 강진 출신 이동연 판사 신변 보호

서울남부지법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보수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 길을 경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7시께 서울 양

천구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강진군동면 출신으로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연합뉴스



PD수첩 조승희 책임피디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PD수첩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제작진, 변호사들과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PD수첩 무죄판결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여야·청와대 반응

20일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여권과 야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우선 여권은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당혹감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돼 가고 있음을 보

與 “법원 이념 편향” 野 “사필귀정” 靑 “침묵으로 답변”

여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광우병 파동’과 관련한 그 동안의 정부 논리를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 과장해 대변인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돼 가고 있음을 보

의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면서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당혹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권은 “법원이 언론탄압을 위한 검찰의 정치재판에 대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판결을 계기로 언론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국민이 승리한 것인 동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 일부 언론에 유죄선고를 한 것”이

라고 호평했으며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사실에 기초해 상식과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대변인은 “재판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연동욱 기자 tuim@



미시스 쇼룸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그녀의 거리를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그녀의 거리를 꾸며나가고 있습니다.